전문성의 죽음을 알리는 예표

서울시청 앞 '빛의 광장' 설계안 일방적 폐기, 문제 많다

전 진 삼 · 건축비평가 | 간향 미디어랩 GML 대표

서울 시청 앞 광장이 5월 1일부터 벌어지는 '하이 서울' 축제의 개막에 맞춰 잔디광장으로 급하게 조성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그곳을 지나는 교통체계의 변화를 감행한 시는 현재 새로이 조성되는 이 광장의 명칭을 공모중에 있기도 하다. 서울시(이명박 시장)는 시청 앞 광장에 걸려 있는 공공의 약속을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소모성 행사를 위한 행사장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듯하다.

바로 그곳에 조성되는 광장의 디자인이, 나라 밖에서까지 관심을 기울였을 만큼 대대적인 설계경기 공모방식을 통해 지난해 당선작 '빛의 광장'을 선정하며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는 사실은 어느새 희미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서울시는 무슨 꿍꿍이속이 있어선지 당선작을 용도폐기하고 잔디광장의 조성에 40억 원의 돈을 풀고 있다. 당장에 들려오는 이유인즉 '빛의 광장'을 만들려면 100억 원이 넘게 들며, 유지관리에 드는 운영비도 매년 8억 원 이상 들기 때문이라는 것과 5월 1일의 행사개막에 맞춰 '빛의 광장' 공기를 맞출 수 없다는 등 사전에 충분히 점검되었거나 이미 대처방안을 세워 놓았어야 마땅할 만한 내용- 일색으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석연치 않은 당선안 폐기 사유

당선작은 시청 앞 광장에 최첨단 전자 설비인 2,003개의 박막액정표시장치(LCD)를 설치하고, 온라인 네트 마당을 조성함으로써 동기가 순수한 시민광장의 유례가 없었던 이 나라에 명실공히 21세기형 광장의 새로운 전범을 구축하는 것을 디자인의 주된 개념으로 삼고 있다. 당선작 발표 이후 한동안 그것의 실현성 여부를 두고 수많은 논란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야기된 바 있으나 설계자(서현, 한양대 건축대학원 교수+인터시티그룹)측은 인내를 가지고 디자인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탄탄한 토대 위에서 소신있게 답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인과 함께 가장 까다로운 항목이 될법했던 현장에 설치될 LCD 모니터 등의 기업 협찬까지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선지 2월 23일 공사 개시 나흘을 앞두고 당선작의 폐기가 결정되었던 것이다.

서울 시청 앞 광장이 5월 1일부터 벌어지는 '하이 서울' 축제의 개막에 맞춰 잔디광장으로 급하게 조성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그곳을 지나는 교통체계의 변화를 감행한 시는 현재 새로이 조성되는 이 광장의 명칭을 공모중에 있기도 하다. 서울시(이명박 시장)는 시청 앞 광장에 걸려 있는 공공의 약속을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소모성 행사를 위한 행사장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듯하다.

설계자 서교수는 주간지 시사저널(안철흥 기자, 2004. 03. 25)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이 같은 사실을 널리 알려 공개적으로 문제 삼겠다. 서울시가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했다. 서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예후가 좋지 않았다. 당선자 발표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려졌던 것이 공식적인 문건의 전부였다. 당선자라고 해서 그 흔한 상장 한 장 받아들지를 못했다. 그 뿐 아니다. 당선자 발표 후 지금껏 한 푼도 손에 쥐지를 못했다.

당선 후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태껏 계약도 체결하지 못했다. 맨땅에 머리치기만 해 온 셈이다. 설계자 속이 시커멓게 타 들어갔을 만한데도 서교수는 참으로 미련퉁이다. 주변에 그 많은 미디어의 원군들을 불러 세우지도 못하고 백주에 설계권을 도둑맞은 꼴이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상상이 된다.

지금 시청 앞 광장은 오픈 스페이스 개념의 타원형 잔디광장으로 조성 중이다. 광장은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최소화한 '비어 있는' 도시의 여백을 살리며 걷고, 휴식하고, 집회가 가능한 열려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서울시는 강조하고 있다. 시 홈페이지에는 조성될 잔디광장의 조감도까지 게재되어 있다. 그 변경안의 설계자가 누구라는 일언반구도 없다. 알아보니 서울시 건설안전본부가 자체 준비한 디자인이라고 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했던가? 당선작을 뽑은 심사위원들의 동의도 없이, 당선한 설계자에게 한 번의 사전 협의도 없이, 당선안을 백지화한다는 발상이 가능했던 것은 시장 보좌관회의의 결정사항이 주효했다는 첩보다. 일껏 만들어 놓은 시청 앞 광장 조성추진위원회의 위상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었다. 참으로 무대포한 처사다.

뒤늦게 설계비 보상 건으로 입장을 정리해 알려달라는 시의 요청을 그것도 외부 루트를 통해 전달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번 문제는 단순히 설계자, 시공자의 위약금 차원에서 무마될 사안이 아니다. (전진삼, 시사저널, 752호, 2004. 03. 25, 96~97쪽 기고문에서 일부 전재)

사건의 전후 내막을 듣고 보면 서교수만 분통터지는 일이 아님에 틀림없다. '빛의 광장' 이 백주에 '탄핵' 된 것이다.

서울시청앞 광장조성 설계공모 당선작. '빛의 광장'

'빛의 광장'의 실현을 기다리던 마음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빛의 광장' 당선작 결정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호의적 입장이 아니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빛의 광장' LCD 모니터 운영방식에 있어서 자칫 상업성 자본에 휘둘릴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컸기 때문이었다. 시민들이 그것을 통해 기발한 발상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된다 하더라도 2,003개라는 수의 제한이 가져오는 피치 못할 상황들이 예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같은 생각이 참조 발언은 될지언정 당선작이 갖는 아이디어의 기발한 착상과 도전해 볼 만한 가치라는 면에서 비견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나는 당선작의 완성을 기다리는 응원군이 되어 있었다.

광장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익숙치 않은 공간적 성격이 한달음에 보편화되어 버린 2002년 월드컵의 열기가 채 가시기 전의 분위기를 타서라기보다는 광장조성에 따른 새로운 아이디어의 구현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또 다른 독특한 우리식 공간 만들기로 세계무대에 내놓을 수 있는 괜찮은 기회가 되겠다 싶었기 때문이었다. 남의 나라 문화 모방하기를 시대의 대세로 파악해 오고 있는 정황 앞에서 서교수의 손이 높이 들려진 것과 그것의 완성에 따른 스타탄생의 공식을 연호해 보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의 도시문화가 한 단계 성장 ·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또한 우리 건축가 혹은 도시환경디자이너들에 의하여 국제적 시선을 끌어낸 국내의 계획안들이 완성을 보지 못하고 미완의 작업으로 남은 몇 번의 사례가 이 땅의 젊은 우리들에게 정신적 공황을 불러일으키는 악재로 작용한다는 우려 섞인 동료 건축인들의 충고도 한몫을 했다.

'천년의 문' 공사 반대자로서의 내 이력

나는 그 이전에 2002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앞에 설치될 뻔한 202미터 높이의 '천년의 문' 프로젝트 성사를 앞장서서 반대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천년의 문' 프로젝트는 철회되었고, 그 후로 설계자 이은석(현 경희대 건축과 교수)씨와 그의 동료들과는 사적으로나마 연락이 두절된 나날을 보내야 했으니 그들이 경험했을 악몽은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골 깊은 수렁 속을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그 같은 국가 선전성 프로젝트가 공공의 건축인 양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없다. 하지만 동시에 앞에서도 거론했듯 그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철회 결정에 쓸려나간 젊은 건축인들의 비감에 대하여 저들 모르게 아파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점 고백하며 늦게나마 그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바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사유들에 의해 발주자 측과 설계자 및 시공자 사이에 의견의 충돌이나 협의의 과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절차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설계경기 당선자에 대한 예우는 시가 발주하는 단순 설계권 계약자 이상의 사회적 명예를 부여하는 것이 양식 있는 태도일 것이다. 그러하기에 (요즘의 전환기적 사회분위기를 등에 업은 말장난 식 표현은 피하고 싶지만) 금번 서울시의 '빛의 광장' 일방적 폐기선언은 문화적 퇴보를 전제한 비도덕적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 프로젝트 하나를 죽이고 살리는 일이야 몇 장의 내부 기안서로도 족한 것이겠지만 그로인해 사회적 공공성을 담보한 약속 불이행이 가져다주는 패배주의의 양성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사태가 아닌 것이다.

암울했던 이전 시대와 달라진 것 없어

그러나 서울시청 앞 '빛의 광장' 조성계획은 '천년의 문'과는 다른 출발과 의미론적으로도 도시공간의 긍정적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프로젝트 성사의 당위성이 확실한 공공의 프로젝트였다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그 같은 사실이 다소 외연이 화려한 '빛의 광장' 당선안으로 하여금 세상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프로젝트라는 시민사회의 신뢰적 구조 안에 정위시키게 했던 사유이다.

그러나 현실은 비겁하게도 단체장과 그 주변인들에 의한 간편장부에 의해 프로젝트가 폐기되는 사태를 맞이하고야 말았으니 건축전문가들의 사회적 위상이 통째로 폐기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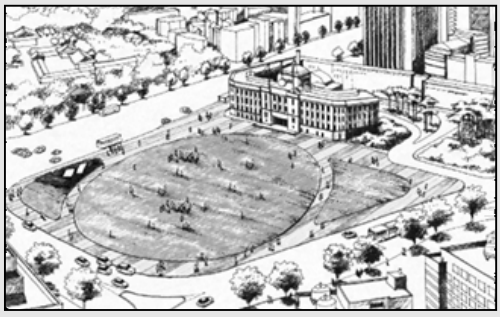
하고 다르지 않은 것이다.

공공의 프로젝트조차 존립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가벼이 처리되는 세태이고서야 민간에서 휘둘림을 당하는 건축가들의 피해사례는 오죽 하겠는가!

적어도 국내 건축전문가 사회에 대한 골 깊은 부정이 어제 오늘의 사태는 아니다. 지난달에도 적은 바 있지만 건축에 있어서 국내 상표를 단 어떠한 문화적 대안도 명품의 대오에 끼지 못한다. 오로지 명품은 외국산이어야 통하는 것이다. 제아무리 괜찮은 아이디어를 가진 서현 교수라도 '일간지 기고를 통한 스타' 의 유명세만 가지고는 명품주의를 선호하고, 그것들을 신주 받들 듯 하는 세상논리 앞에서는 별수가 없었던 듯하다. 더욱이 정치적 수위를 조절하는 행정 관료들의 사회에서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서교수에게는 '빛의 광장' 설계권을 줬을 뿐이다. 당선작이 사실상 취소된 상태에서 그에게 모든 사항을 알릴 의무는 없다"

이것은 서울시 실무책임자가 서교수에게 사전에 공식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한 당돌한 언사다. 프로젝트의 총공사규모가 작아서였는지, 누군가 서교수의 안을 음해하는 이가 시장 주변에 달라붙어 있어서였는지 서울시가 시 홍보차원에서 '빛의 광장' 을 앞세우던 것치고는 당선자에 대한 예우가 너무 심하다. 마치 공사도면 허가서류를 가지고 온 일개 업자 취급하는 투가 역력하다. 민선 시장과 그의 하수들이라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암울했던 이전 시대와 정말 이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서울시청앞 '잔디 광장' 예상도

지금 왜 투쟁해야 하는가

서교수가 서울시를 상대로 투쟁에 돌입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것이 단지 얼마 안 되는 위약금 정도 타내기 위한 결심이 아니라는 점, 그의 평소 언행을 봐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프로젝트의 성사를 다투는 중대사다. 문제는 주변 건축인들의 태도에 있다. 가뜩이나 사회적으로 대통령 탄핵의 폭풍지대 위에 서 있음으로 서교수의 난처함이 시대의 냉대 속에 감춰지기 꼭 알맞다. 그런 면에서 서교수와 '빛의 광장' 은 시대 운을 타지 못하는 조짐이 보인다. 건축문화의 공황이다.

설계경기라고 하는 제도는 음지의 퇴행적 문화를 배제시키고, 양지의 문화적 단층을 쌓아가기 위하여 도입하고 있는 문화적 장치이다. 여기에는 시행하는 측이나 참여하는 측이나 그것의 시발이 정당하고, 중간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었을 경우 심사위원들에 의한 어떠한 결과에도 승복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왔다. 또한 그 결과가 하나의 바람직한 환경문화로서 이 땅에 등장하는 것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암묵적 동의하에 수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사회적 약속이 천재지변의 사유가 아닐 바에야 당대의 문화적 수위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로서 존중되고, 존속될 때만이 그 사회의 건강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사유들에 의해 발주자 측과 설계자 및 시공자 사이에 의견의 충돌이나 협의의 과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절차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설계경기 당선자에 대한 예우는 시가 발주하는 단순 설계권 계약자 이상의 사회적 명예를 부여하는 것이 양식있는 태도일 것이다. 그러하기에(요즘의 전환기적 사회분위기를 등에 업은 말장난 식 표현은 피하고 싶지만) 금번 서울시의 '빛의 광장' 일방적 폐기선언은 문화적 퇴보를 전제한 비도덕적 '쿠데타' 에 다름 아니다. 프로젝트 하나를 죽이고 살리는 일이야 몇 장의 내부 기안서로도 족한 것이겠지만 그로인해 사회적 공공성을 담보한 약속 불이행이 가져다주는 패배주의의 양성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사태가 아닌 것이다.